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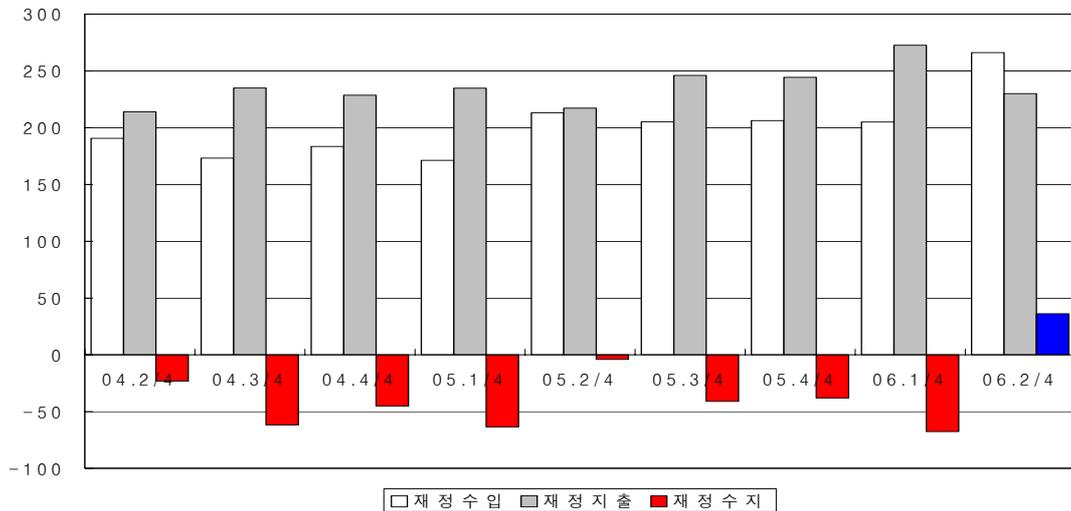
금년도 재정수지 호전의 虛와 實

재정수지 적자규모 전년 동기의 절반 이하로 감소

2006년 상반기 중 필리핀의 재정수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그 원인과 향후 필리핀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재정수지 적자는 442억 페소(8억 달러)로서 2005년 같은 기간의 659억 페소보다 200억 페소 이상 줄어들었으며, 금년 6월 중에도 정부 재

〈그림〉 필리핀 재정수지 현황 단위: 십억 페소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6. 7.

정수입은 813억 페소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31%나 증가한 반면, 재정지출은 686억 페소로 11% 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6년 상반기 정부 재정수입 총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4,711억 페소(89억 달러)를, 재정지출은 10% 늘어난 5,026억 페소를 기록하였고, 4월부터 3개월 연속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함에 따라 2006년 상반기 중 필리핀의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해 상반기의 675억 페소에서 절반 넘게 줄어든 315억 페소를 기록하였다.

이 같은 적자는 필리핀 정부가 당초 2006년 상반기 중 목표로 했던 904억 페소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서, 필리핀 정부는 금년 2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확대 조치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금년 말까지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00억 페소까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¹⁾ 필리핀은 지난 2002년 GDP의 5.4%에 육박하는 2,130억 페소의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재정수지 적자가 1,470억 페소에 이르렀다. 또, 금년 중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1,250억 페소까지 이를 수 있다고 당초 필리핀 정부가 자체 예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개선이다.

재정수지 개선 외화내빈에 머물러

그러나 재정수지 호전의 원인을 좀더 깊

이 살펴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우선 재정수지 호전이 세수증가가 아닌 정부지출 억제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다. 2005년 이후 필리핀 의회는 잇달아 탄핵정국과 비상사태 정국을 맞으면서 아직도 2006년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일 만큼 사실상 개점 휴업상태에 있다. 당해년도 예산안의 처리가 늦어진 경우가 이번만은 아니지만 통상 부활절을 전후로 한 이른바 ‘부활절 휴회’ 기간 이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해 왔던 전례를 살펴볼 때 7월이 다 가도록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²⁾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외채 이자지급 등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5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만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지출이 의도하지 않게 억제되면서 필리핀의 재정수지 상황이 호전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필리핀 정부의 재정수입은 부가가치세 확대 등에 힘입어 정부의 당초 목표보다 3.3% 가량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지출은 당초 목표보다 8%나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필리핀 정부는 외채상환 등 경상적 지출이 당초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지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필리핀 정부의 주장과는 다소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금년 1월에서 5월까지 외채상환에 정부지출 중 총 33.2%가 사용

1) 사실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00억 페소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필리핀 정부의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면이 있음.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전망하자면 금년 중 재정수지 적자폭은 GDP의 약 1.3% 수준인 775억 페소, 2007년에 이르러서는 GDP의 약 0.9% 수준인 570억 페소로 감소할 전망이다.

2) 의회 일정상 2006년 예산안 통과를 아무리 빨라야 의회가 다시 소집되는 7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되어 전년 동기의 33.3%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고, 게다가 이자 지급분은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1.5% 가량 초과 지출되면서 다른 정부지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즉, 세수 증가가 아닌 지출 감소로 인해 인위적인 재정수지 호전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출감소 역시 자본적 지출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한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에 기인한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필리핀이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빈곤퇴치 분야에 대한 재정지출이 가장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1998년 이후 8년째 이어져 오던 재정수지 적자 확대가 잠시 주춤하고 있다고 해서 반가워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재정수지가 호전되더라도 중장기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인프라 개발과 빈곤 퇴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재정수지 호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³⁾

정치적 불안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될 가능성 높아

지금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로요 대

통령의 지도력 부재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아로요 대통령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된 사임 요구, 개표조작 혐의와 금년 2월의 쿠데타 시도를 국가 비상사태 선포라는 초강경 대응으로 헤쳐 나오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군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심지어 마르코스 시기의 독재 정치로 회귀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부정선거, 부정부패, 헌법유린 등의 이유로 하원에 탄핵안이 제출되었다가 부결되었고, 1년만인 올해 6월 정적에 대한 살해 혐의까지 추가된 탄핵안이 다시 하원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⁴⁾ 하원 236석 중 친정부 성향의원이 186명인 상황에서 상원으로 탄핵안을 송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득표수(78명, 하원의 1/3)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아로요 대통령이 금번 탄핵안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 5월 대법원은 지난 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던 아로요의 행동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아로요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힌 바 있다. 이에 아로요 대통령은 올해 6월 사형제를 폐지하는 등 인기만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⁵⁾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았으나, 사형제 폐지보다 더 우려스러운

정정 불안으로 인해 3/4분기 이후에나 예산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3) 필리핀 정부는 당초 2005년 예산안보다 300억 페소가 늘어난 869억 페소 규모의 200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증액분의 절반가량을 필리핀의 가장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인 교통부문에 집중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필리핀은 교통부문에 대해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를 실행해 온 결과 운송부문의 낙후성이 필리핀 경제가 2~3% 이상 더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잠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4) 필리핀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최초 탄핵안 제출 후 최소한 1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할 수 있음.

5) 현재 필리핀에는 약 1,200명의 사형수가 있으며, 사형제도 폐지를 통해 아로요 대통령은 필리핀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카톨릭계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음. 이에 야당 세력 역시 금년 6월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카톨릭계 주요 인사를 끌어들이는 등 양측은 카톨릭계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구애의 손길을 뻗치고 있음.

것은 아로요 정부가 인기회복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여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창출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⁶⁾ 결론적으로, 필리핀 정부의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노력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확대 등 세수 확

장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이 향후에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지와 우선순위와 경제적 효과에 입각한 효과적인 재정지출이 이루어질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김기상】

6) 그러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민다나오 섬을 포함한 남부의 이슬람 지역을 꼽을 수 있음. 이 지역을 근거로 활동 중인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MILF)는 지난 1978년 이래 끊임없는 테러행위와 정부군과의 무력충돌을 벌이고 있으며 그 와중에 약 12만 명이 목숨을 잃었음. 이들의 주요 활동무대인 민다나오 섬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약 5백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교도들은 궁극적으로는 이슬람 독립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필리핀 정부와 이들 반군과의 평화협상은 아직도 완결되지 않은 상황인데, 카톨릭계 지도자들과 민다나오 지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와 MILF 모두 휴전을 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필리핀 정부가 평화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지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욕심에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